

# 삼바와 모뉴엘은 다르다

## ‘분식회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윤 위 중 역

데스크 칼럼

며칠 전, 서울역 앞에서 ‘문지마 폭행’을 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할 뿐더러,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자,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쥐락펴락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8일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리적으로 보자면 형사소송법 제 70조에 근거해 이재용 부회장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을 뿐 아니라 ▲도주의 염려도 없어 구속영장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 부회장이 검찰의 자존심을 건드려 ‘괘씸죄’를 받게 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미 이 부회장과 삼성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 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고도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위법하게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시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게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시각이다.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판단하는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는 회계다. 회계는 경영의 결과물을 표시하는 일종의 ‘언어’이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문제는 검찰이 바라보는 회계라는 언어와 기업이 사용하는 회계라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검찰이 요구하는 것처럼, 딱 부러지는 회계는 세상에 없다. 회계는 선택과 판단의 문제이고 그 결정과 책임은 기업에 있다.

가령 상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며 카드를 긁을 때가, 아니면 몇 주 뒤 카드 대금이 입금될 때가. 카드대금이 입금될 때 매출로 인식하면 분식회계인가. 현금주의 회계에선 그 시점을 매출로 인식하기도 한다. 오토이 상점의 회계정책이나 판단의 문제일 뿐, 이

를 가지고 처벌할 순 없다.

제대로 문제삼고 처벌해야 하는 분식회계는 과거 모뉴엘처럼 실적도 없으면서 자금을 끌어오거나, 은행 차입을 일으키기 위해 고의적,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다.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주식투자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행위는 엄단해야 마땅하다.

삼바와 모뉴엘이 다르다는 점은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검찰의 시각이 과거 한 시민단체 측의 입장과 너무 비슷하다는 점이다.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했던 김기식 전 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재조사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일부에선 검찰이 “부정승계를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당시 시민단체의 정황적 결론을 함리적 의심없이 미리 수용하기로 결론내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 과거에 또 발목잡힌 삼성 대규모 투자 물거품 우려

>> 1면 ‘이재용, 구속 기로’서 계속

이재용 부회장 경영 행보에 제동  
신사업 활용할 113조도 표류 야기  
투자 위축, 재계 전체 도미노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진영 기자 son@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자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이 부회장은 파운드리 투자에 힘을 쏟으며 미국 팹리스 협력사들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중국 시안 공장을 방문하는 등 양국 사이에서 미묘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이런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 확대 전략에서도 이 부회장 구속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5G 사업은 정부기관에서 주도하는 게 일반적. 이 부회장이 최근 몇년간 각국 주요 관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시장 점유율을 10% 대에서 지난해 23.3%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있기 때문. 이 부회장이 없으면 이런 ‘고공 플레이’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삼성은 적극적으로 소재와 장비 국산화에 나선바 있다. 최근에도 이 부회장이 파운드리 투자 강화를 지시하면서 관련 업계 주가도 경풍 뛰어올랐지만, 이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 소식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반도체뿐 아니다. 미래 성장 분야인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도 당장 실적을 내기 어려운 탓에 이 부회장의 결정이 절실하다는 분위기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 시장도 계속 위축되는 상황

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혁신이 멈추면 중국의 추격에 무방비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실탄 100조원’도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113조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이를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인수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직접 전세계를 돌며 유망 기업들을 물색해왔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또 다른 미래를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투자 위축이 삼성에서만 끝나지도 않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재계 전체에도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는 것은 어떤 경영인이라도 법리적 해석에 앞서 심증이나 일부 여론에 따라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다른 기업들이 당장 투자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예전과 같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고 경영에 나서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무리한 영장 청구... “檢, JY 망신 주기” 비판

구속영장 당위성 놓고 논란  
법조계 “구속사유 해당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여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구속 당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함께 다.

구속 여부는 이날 심사가 끝난 후 판가름날 예정이다. 이르면 8일 오후, 늦어도 9일 새벽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을 저평가하고, 대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여 합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재계와 법조계 등 각계에서

는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구속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이 부회장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시위를 할 정도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글로벌 기업 총수 위치에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 이미 수년간 관련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시도도 무의미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인 형태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계속 있었다면, 그 동안에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구속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시각도 있다. 사법당국은 2000년대들어 ‘조서 중심주의’를 일제시대 잔재라는 이유로 지양하고, 대신 2003년부터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내세워왔다.

굳이 이 부회장을 구속시켜 자백을 받아 내리는 시도에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통해 이 부회장을 ‘망신 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이 부회장이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서 무리한 수사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으로 이 부회장을 공격했다는 해석이다.

현실적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관련 업무를 지시했음을 밝히는 어려운 만큼, 처벌보다는 문제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영 체계를 대입해보면 이 부회장이 개별 업무를 승인했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업무를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무리한 처벌로 사법 당국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기도,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묵묵부답 HDC현산, 인수 포기 ‘모락모락’

>> 1면 “아시아나 인수 여부”서 계속

그러나 산은과 수은 등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기업결합심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등 6개국에 신고하고 러시아 한 곳만 남은 상태. 또한 러시아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더구나 채권단은 코로나19에 따라 조건변경을 원하면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묵묵부답이었다. 내용증명이 자체적으로 특별한 효력이 있진 않지만 독촉을 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만큼 채권단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2500억원 지불하고 ‘승자의 저주’ 피할지 주목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영업손실은 3700억원, 당기순손

실은 6700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2018년 649.3%에서 작년 1386.7%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목표인 운항률을 현재 8%에서 최대 17%까지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HDC현대산업개발이 주식가치 대비 3배 이상의 값을 치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인수가 무산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2500억원을 손해 보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인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시점”이라며 “정상화를 위한 자금투입 등을 고려했을 때 인수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차리 계약금이 아깝더라도 인수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정확한 결과는 오는 27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